

시론



김선옥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원하는 소식이 늦어지고, 마음이 향할 곳에 닿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공백이라 부른다. 그러나 삶은 그 비어 있는 듯한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이 숨을 고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이, 보이지 않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씨앗은 땅속에서 서두르지 않는다. 어둠과 습기를 견디며 자신의 때를 준비한다. 겉으로는 침묵이지만 내부에서는 생명의 질서가 조용히 움직인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가장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생명의 과정이다. 우리가 조금씩 결과를 앞당기려 할 때 놓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성장의 시간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도착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 빠르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충분히 익힌 것은 오래 남는다. 기다림은 욕망의 속도를 낮추고 존재의 깊이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타인의 리듬을 받아들이며 세상의 흐름과 조화를 이

기다림의 미학

루어 간다.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 문장은 기다림의 본질을 조용히 드러낸다. 고요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바깥을 향하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힘을 얻는다. 기다림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내면을 정돈하는 시간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애는 수많은 기다림으로 이뤄져 있다. 계절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관계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며 한 문장이 완성되길 기다린다. 이러한 시간들이 없다면 도착의 기쁨도 만남의 의미도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기다림은 결과를 위한 자연이 아니라 의미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실패와 혼동한다. 아무 일도 이뤄지지 않는 시간이라고 단정하며 그 시간을 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기다림은 결코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고 있는 시간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속도를 늦추는 데서 시작된다. 기다림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질문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이 길이 맞는지, 지금의 침묵이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느린 방식으로 완성된다. 새벽은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야 오고 꽃은 오랜 준비 끝에 피어난다. 서두름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이가 기다림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기다림 역시 의미를 품을 때 비로소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유 없는 인내는 쉽게 지치지만 방향을 가진 인내는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간을 신뢰하는 태도, 그것이 기다림을 성숙으로 이끄는 힘이다.

기다림은 비워내는 일이다. 조금씩을 내려놓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억지로 끌어오려는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는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사유가 스며든다.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된다. 삶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으며 그 속도를 존중할 때 비로소 균형이 생긴다는 사실을.

결국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미학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완성의 과정이며 인간을 더 깊고 넓은 존재로 이끄는 시간이다. 바람이 사라진 뒤에도 울림이 남듯 오래 견디는 시간은 반드시 삶의 깊이로 남는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완성해 가는 가장 고요한 힘이다.

社說

열두번째 봄, 세월호 선체 보존 사업도 차질 없어야

해양수산부가 전담 목표선상에 거처된 세월호 선체 이전 및 보존 방안을 제시했다. 신항 인근의 고하도 앞 해상을 매립한 부지로 옮기고 주변에 전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현재 세월호가 비바람과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돼 훼손이 가속화하는 만큼 완전하게 덮는 대형 건축물을 설치해 외부 환경과 차단하는 ‘하우징(housing)’ 방식을 제안했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금속 부식과 구조물 변형을 최소화해 원형 보존에 유리한 까닭이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 수확여행에 오른 학생들이 이유도 모른채 차가운 바다 속에서 황망히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야 했던 사회적 참사로 기록됐다. 하지만 유족들의 애타는 절규에도 10년이 넘도록 진상 규명은 멀어 보인다. 여태껏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더구나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 아래 생명의 가치를 경시한 탓으로 참혹한 사고는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4·16재단과 가족협의회 관

계자, 지역 주민 등 100명이 참석했으며, 해수부는 의견 수렴 등으로 추가적인 보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완성행이 아니라며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선체 이동 시점은 부지 조성 및 기반 공사가 이뤄진 이후인 2028년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콘텐츠 도입 구상도 차근차근 진척돼야 한다. 단계적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잘 마무리해야 하겠다.

살아 있었다면 서른살의 어엿한 청년이 됐다. 유족의 시간은 여전히 18살에 멈춰 있다. 아이들 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날의 진실을 낱알이 밝혀야 한다며 지금도 견고 또 견고다. 국민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고 있고 연대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은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가 꼭 실현되길 소원하고 있다. 열두번째 봄이다. 희생자를 위로하며 노란리본을 맨다. 촛불을 다시 든다.

입법예고 전남광주특별시 시행령 주민 체감도가 핵심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3월 1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광주·전남연구원 관계부처의 검토 등을 거쳐 지역 여건과 특별시 특수성을 반영했다.

주요 특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권한 위임,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방법, 지역인재 특별 전형,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등이 포함됐다. 사·도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일 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 활성화 27개, 기타 15개로 이뤄졌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운영되는 전남광주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참석 대상 중앙행정 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결 정족

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산업활성화 부문의 경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사항을 지능형전력망부상 투자 비용 등으로 명시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 행안부는 맞춤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특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다.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로 의미를 갖는다. 해서 수정·보완해야 한다 면 전폭 수용하기 위해 전력해야 한다. 시행령안을 더 면밀히 살핀 뒤 완벽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부터 입사처리로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전남광주특별시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빈틈이 없어야 한다. 주민들이 실질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다. 지역이 주도해 스스로 성장의 미래를 여는 시작이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대민서비스와 행정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반 절차를 무사히 완수하길 바란다.

기고



이민원 전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민간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행정통합 우대, 말이 아닌 배치로 증명하라

라는 약속의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칫하면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고 통합의 동력을 잃게 할 세 가지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물량만 2배이고 질은 반토막’일 위험이다. 단순히 행정 집행 기능만 수행하는 소규모 기관 2개를 배정해 놓고 ‘2배 우대’라고 포장한다면 이는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꿀 동력이 될 수 없다.

지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양적인 2배를 넘어 질적 수준에서도 2배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진 핵심 기관의 유치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지역의 전략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기관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의 아쉬움이 반복될 위험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주도했던 1차 이전은 153개 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에 기여했으나 기관들이 지역 사회와 섞이지 못한 채 ‘섬 혁신도시’로 남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모다불의 원리’에 비유하며 장작을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불을 피울 수 없듯이 공공기관 역시 특정 거점에 집적시켜야 강력한 성장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 구역의 장벽을 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집적 배치’를 통한 집적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다.

셋째, 정치적 형평성 논란이 실질적인 배치를 무력화할 위험이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을 제기하며 다수급 ‘나눠주기식’ 배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후 관계를 망각한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결단하고 법적 절차를 마친 지역에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다.

만약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을 다시 전국에 흩뿌린다면 2차 이전은 1차의 복사판이 되고 정부의 행정통합 우대 약속은 빈껍데기 공약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의 ‘파격적 우대’ 약속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정한 5대 전략 분야(에너지·환경, 농수산, AI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목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R&D 기능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기관들을 통합특별시의 산업 벨트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물량 2배와 질적 수준 2배를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경로다. 연간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 역시 이러한 핵심 기관 유치와 연계될 때 비로소 지역 소멸을 막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토 재설계의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지역민들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대권을 내놓으며 통합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니라 ‘배치’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결단에 화답해야 한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서 보여줄 정부의 결단은 단순히 기관 몇 개를 옮기는 문제를 넘어 지방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독자투고



농번기철에는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면서 도로 위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농기계의 저속운행으로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 위험이 증가하고, 농로와 일반도로의 혼용 사용으로 예측이 어려운 입·진출, 운전자의 고령화로 반응 속도 저하 등이 농번기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이다.

특히 트랙터, 콤팩트 같은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속도·구조가 달라 사고 시 피

농번기철 대비 농기계 교통사고 주의

해가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운전자는 야간 운행 시 반드시 ▲ 등화장치 및 반사판 부착 ▲도로 진입 전 좌우 확인 철저 ▲농로 이용 ▲불가피할 경우 도로 가장자리 주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일반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서 농기계 발견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좁은 시골길

에서 무리한 추월 금지, 야간에는 전방 주시 강화 및 교차로나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농번기는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 배려하는 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농기계와 일반 차량 모두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길 바란다. <윤수경·장흥경찰서 경무과>

* 독자투고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연방정 만기연장. 개선 2026년 4월 17일부터 시행.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불허.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불허.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불허.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불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증가를 올해 1.5%로 낮추며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0%를 부여하는 등 엄격한 페널티를 주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도 가계부채 수준,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총량 관리 목표는 전년 실적(1.7%)보다 줄어든 1.5%다.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3분의 1에 못미친다. 성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안정화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작년 88.6%로 하락했으며, 내년에는 87.0~8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규제

Table with 2 columns: 원안, 개선. Rows include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and 주담대대출한도. LTV: 일반 40%, 규제지역 70%. 주담대대출한도: 연세금융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 2억원.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화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